

환경보건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장재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과거 오랜 기간동안 우리 정부 내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를 자신들의 임무로 생각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경향을 갖고 있다. 학계 및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점 때문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회의 요구나 갈등에 대해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실정에서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족과 욕구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분출되곤 했다. 본고에서는 환경보건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제한 때문에 필자의 제한된 경험이나 인지 범위 안의 사건에 대해서만 고찰되었다.

환경단체가 환경보건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은 1980년대 온산공단주민들의 건강피해, 상봉동 진폐증사건으로부터 1990년대 초반의 수돗물폐놀사건을 거쳐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사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문제화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1990년 초반에 이르면 환경단체는 기존 학계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직접 연구소를 설립하고 상근 연구원을 배치하여 공단지역의 주민건강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되는 환경보건문제는 ‘매항리 지역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건강피해’,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나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환경보건문제에 대해 대표적인 지역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많은 지역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환경호르몬 민간대책위원회,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종 보건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쟁에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소수의 전문가가 환경단체에 참여하던 시대를 지나 최근에는 다수의 전문가, 학자들이 위원회 형태로 환경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토대로 최근 수년간 환경단체는 수도권 대기오염, 위해성평가, 식품의 안전기준, 간이상수도의 안전문제 등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까지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단순히 문제제기를 넘어서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제정, 환경보건10개년계획수립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도 참여할 정도로 역할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의사협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운영하는 21세기생명환경위원회, 환경단체와 예방의학과와 수도전문학자들이 결성한 수돗물시민회의,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회 등의 활동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와 의학전문가들의 공동작업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환경보건분야에서의 환경단체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